

<공동세미나>

제도적 관점에서 본 규제개혁 방안

- ☐ 일시: 2022년 9월 21일 (수) 오후 2시
- ☐ 장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 ☐ 주최: 자유기업원, 한국규제학회

☐ 발표: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토론: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발제]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현황과 방향성 진단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현황과 방향성 진단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이혁우 교수

2022. 9. 21.

이전 정부와 비교

규제개혁 목표 비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6) 정부개입을 최소화 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전 과정을 현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 밀착관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30) 국민생활 불편은 해소하고 중기,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재설계로 민생안전 도모, 생명, 안전, 환경 규제의 혁신으로 국민보호 /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기술, 신산업 육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은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통한
‘시장경제의 기능 정상화’에 방점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국민보호, 신산업 육성, 규제위
투명성(위원 다양화)’ 등 가치지향성을 지녔음



규제개혁은 정부가 만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불합리한 규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것

정부에 의한 사회적 부담을
정부가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가 규제개혁의 본질에 가까움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대표 상품인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유예(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통한 신기술 분야 규제 애로
해소

다수 사례를 통해 규제혁신이 이루어졌지만, 규제의 근본적
개혁이 아닌 임시조치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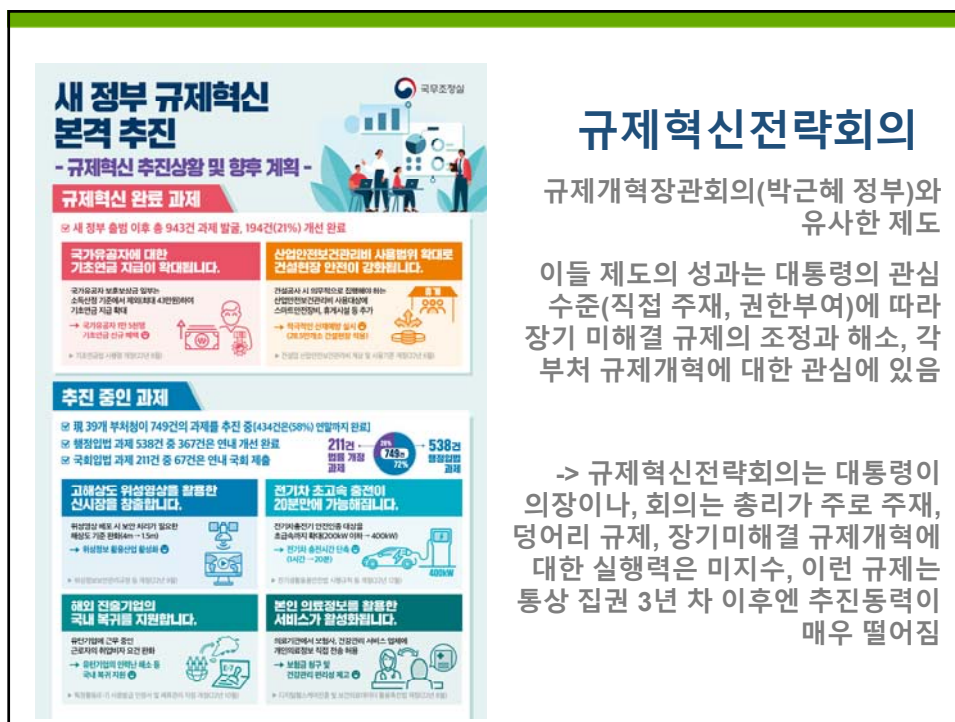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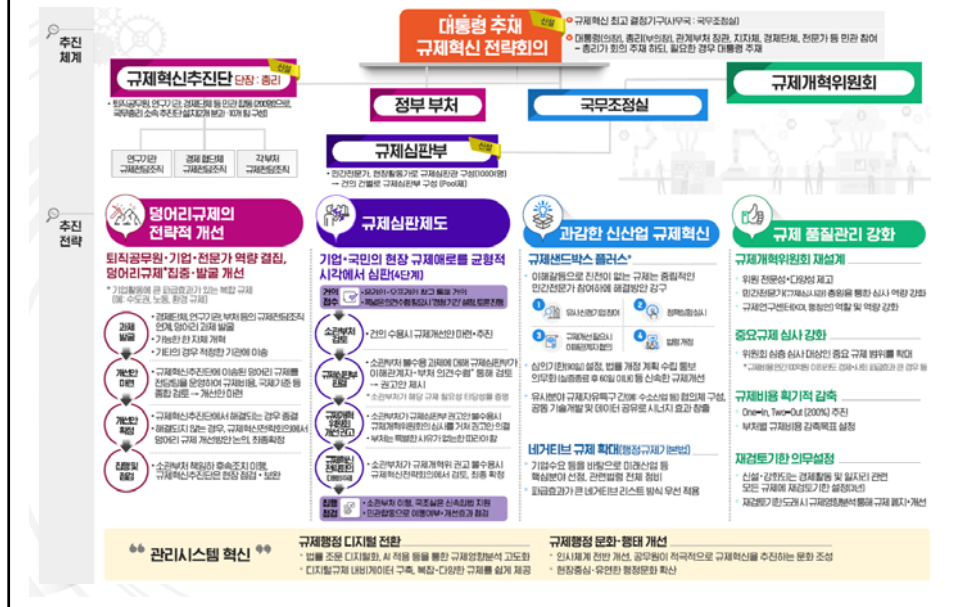
윤석열 정부에서 덩어리 규제의 선제적 해소를 제시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규제개혁을 지향하는 것

그 외,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다수 규제가
도입(부동산, 민식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 혼란이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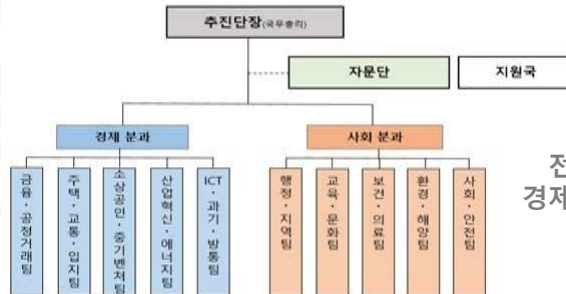


규제개혁 거버넌스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추진체계



규제혁신추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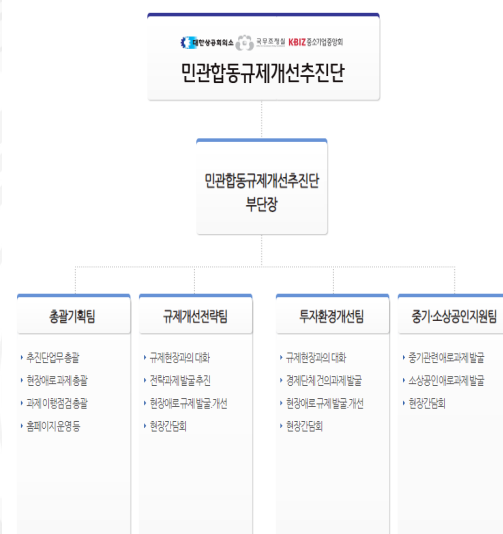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기구
전직공무원(86명),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37명), 지원국
직원(150명)으로 구성

덩어리 규제개혁에 핵심인
최고 의사결정자의 관심 및
엘리트 직원의 지원체계의
측면에서 덩어리 규제 원활한
개선에 어려움 예상

->(비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달 1회 개최), 대통령과 각
부처 임원들이 참여 안건 상정,
이를 위해 각 부처 엘리트
공무원 파견

규제혁신추진단



새로운 규제어젠다
발굴/연구/제안 기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무슨 차이?

구분	제출인원	직급	주요 담당업무	군무 제경 부서
기획 공무원	150명 내외	가견제 근무자	○당여과 규제 개선을 위한 일련의 업무 담당 • 당여과 규제 개선 담당 • 이해관계자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현장 조사 등 • 개선 사항 실행 및 공개 부처 간 조정, 개선방안 도출 등	국무조정실 규제 혁신 추진단 (서울특별시)
민간 전문가	10명 내외			

군무조진

● **계약기간**
 - 제1차 ~ ~ '23.7.25까지 (영도 일자를 통해 계약 가능)
 - '23.7.28 계약 (현상 시 추후 불변)

● **보수**
 - 월 196만 원 내외 (계약 금액 전, 우당 별도)
 - ※초기 근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나, 이 중 주 공무원 주급이 감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무실 업무 참여 기준 월 140만 원 이상 시은 근로소득 발생)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단, 독자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은 불용됨

● **군무지**
 - 서울특별시(정부 서울 청사)

● **군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상근 원칙, 유연 근무 활용 가능)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단원 추가 모집**

국무조정실(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당여과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혁신추진단 단원(비직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차 채용공고(6.20~27시) 근무조건을 명확하여
추가로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기간 '22.7.4.(월)~'22.7.8.(금) 18시

규제심판부

국무조정실이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온라인 토론에서는 규제
폐지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총 307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의 87.5%인
2689명이 규제 폐지
'반대'에 표를 던졌고,
'찬성' 의견은
337명(11.0%)에 그쳤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2주간(8.5~18)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누구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심판 바로가기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 18882호, 2022. 1. 4. 법률 제정]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정 2010. 1. 25>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4. 16>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산업 규제정보 기본계획 및 규제정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신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임의 위원회로 운영 -> 신설강화규제 심사에 국한, 제한적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문제점	내 용
역량부족	발굴된 규제의 선별, 개선대상 규제분석 및 대안제시 역량이 현저히 부족, 부처의 규제방어 논리에 대응하지 못함
조정부재	규제개선 조정회의 사실상 미작동, 규제 소관부처는 규제조정을 위한 협의에 매우 소극적. 특히, 실무수준 규제조정에는 최소 과장급이 참여해야 실효적임에도, 현실에서는 주무관/사무관 참여 유도도 어려운 실정, 이 경우, 규제개혁을 위한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부처의 무대응과 지연 전략은 규제방어의 최대무기)
규개위 운영 한계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위주(이것도 매우 소수의 규제에 대해서만 작동),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점검 및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자원부족	규제조정실(국무조정실 내 1급 기구)은 100명 내외, 규제개혁 전담기구(사무국)이나, 대부분 타부처 파견공무원, 국조실 내에서도 순환보직으로 규제개혁 역량 태부족, 규제개혁을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 그 결과, 개별규제 개선업무, 규제심사 대응, 규제일몰제는 외부 전문가(외부센터)에 의뢰, 일회적·단편적·형식적 운영
인식부재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부 내에는 규제개혁을 이미 충분히 했다는 인식도 존재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조정실(사무국), 각 부처(부서) 규제발굴 부서

규제개혁 거버넌스 개편 과정

문제점	내 용
규제개혁위원회	모든 정부 운영/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강력, 비상임의 행정위원회로 김대중 정부 이후, 신설 및 강화 규제 심사 기구로 위축(그 마저도 정부 별로 기록이 큼). 자원한계로 매우 제한된 규제만 실질적 심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이명박 정부 한시 기구, 청와대의 강력한 장악력의 상징, 일부 성과,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위축, 역할 제한적, 정부 교체 이후 해체, 규제개혁 역량 와해 규제일몰제 적용 -> 자원의 부재로, 이후 정부에서 요식적 관리 중
규제개혁장관회의	박근혜 정부 한시 기구, 각 부처 분기별 대통령 회의체 보고, 각 부처에 경쟁적 규제 개혁 유도, 국무조정실장 민간전문가 임명으로 소극적 규제개혁 대응, 정부교체로 규제개혁 기조가 바뀌며 위축
4차 산업혁명위원회	문재인 정부 한시 기구, 민간위원회로 책임성 부재, 행정부에 강행성 없음. 몇몇 과제에 대한 이벤트성 대응은 가능하나 이 마저도 부처에서 소극적이면 어려움
규제 샌드박스 체계	문재인 정부 도입, 일부 성과, 6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입장에서는 혼동, 규제소관부처가 버티면 조정이 안 되는 구조, 샌드박스 통과를 전제로 규제성 조건 다수 부과, 임시 유예 제도로 보완적 제도임

자주 바뀌었으나 정착은 안 되고, 예산/조직/인적자원 투자도 안 되었음.

* 정부 내 규제 관리 역량 축적이 안 됨

문제의식

GOV.UK

Topics Government activity

Her Majesty Queen Elizabeth II
21 April 1926 to 8 September 2022
[Read about the arrangements following The Queen's death](#)

Hom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

Th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 leads the regulatory reform agenda across government.

BRE is a unit within 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It works with government departments to monitor the measurement of regulatory burdens and coordinate their reduction, and to ensure that the regulation which remains is smarter, better targeted and less costly to business.

- [Better regulation framework: interim guidance](#)

언제까지 새 술은 새 부대에? -> 규제개혁위원회 강화가 필요함



규제개혁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정무적 구성 타파

사무국 확대
(독자 예산 확보,
규제개혁친화관료,
규제개혁 조정력 제고)



남은, 중요한 이슈

의원입법 대응: 지속 과제

과잉입법 규제 법안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일/의원	법안(개정안)
2013년 9월11일 이한구(새누리당)	국회법 규제 법안 제출할 때 규제사전검토서 첨부
2015년 4월30일 민현주(새누리당)	국회입법조사처법 입법조사처의 업무에 법률안 입법영향분석 추가
2016년 8월23일 김중석(새누리당)	국회법 의원입법에 한해 규제영향분석을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016년 11월24일 지상욱(새누리당)	국회법 규제 신설 법안의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의무화
2018년 9월28일 백재현(더불어민주당)	국회입법조사처법 입법조사처의 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법적 근거 마련
2020년 8월18일 이종배(국민의힘)	국회법 의원입법에 한해 규제영향분석을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머니투데이, 2021. 1.6.

※ 의원입법
품질 점검
(민간)

※ 법안실명제

민식이법
vs
강훈식법

※ 청부입법?
타다금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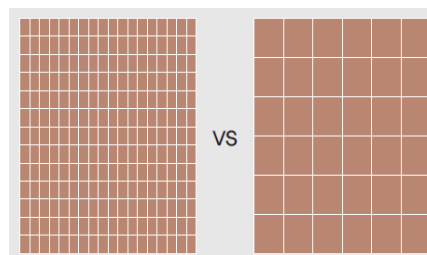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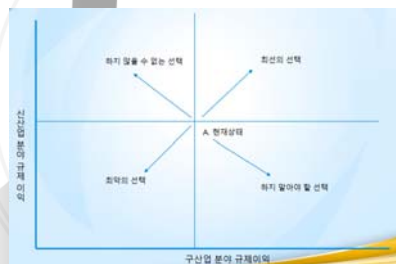
결국, 국회내
장치 마련 시급

간막이 규제 해소: 법률일제 정비

상시성, 실질성, 심층성이 핵심 -> 거버넌스 및 예산과 관련이 있음

규제개혁 의제는 곤란도별, 중요도별, 개선요구 주체별 등 여러 방식으로 유형화 가능하며, 이미 정부, 민간전문가 등을 통해 상당부분 확인되어 있으며, 국민(이해당사자, 협·단체, 주요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대상 규제를 건의하고 있음. 필요시, 신속하게 수집·정리가 가능함.

※ 따라서 규제개혁은 정부 내 규제관리 시스템과 역량, 의지의 문제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분야	개선 대상 규제	관련 지방자치단체
건설	- 지역 건설업체 허도급 비율 확대(50%~70% 이상) - 장비·자재(50%~70% 이상) 우선 사용 -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50% 이상) - 민간 개발 공사 지역 업체 참여, 직접 시공 확대 - 건설 업체 등록 일정 기간(1년) 경과 후 입찰 참가 허용	16개 광역(서울제외), 109개 기초단체
열외 조영	공공기관 등 조영 고체 시 지역 업체 열외(LEO) 조영 우선 사용	8개 광역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전북, 전남, 충북)
문화 예술	신축 건물에 제주지역 작가의 작품 우선 설치	1개 광역(제주)

출처: 공적거버넌스학회, 2015.5.1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조례개선 권고'

**조례 도입 시
경쟁영향평가 도입**

**지자체 간
시장 광역화 필요**

서울·부산·인천 등 161개 광역·기초단체는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연고를 둔 사람을 우대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운전 경력보다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우선순위로 두는 조례·규칙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주·울산 등 165개 광역·기초단체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지역 농수산물물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선정한 향토기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규칙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충북·청주·강원 원주 등 21개 광역·기초단체는 조례에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디지털 전환과 규제관리

규제/ 규제집행	*표준화 *보호적 규제 *비용편익분석 *One-in, one-out/ 규제상쇄 (Regulatory offsetting)	16. 소비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업과 기업활동을 파악하고 리스크가 적은 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을 경감 (Risk-based regulation)
		17. 패널티를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준수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준수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 (Positive enforcement strategies)
		18. 법령을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코드화시킴. 개정 시 자동 업데이트시키고 민간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함. (Legislation as code)
		19. 레그테크 기술을 통해 규제입안, 관리, inspection, 집행을 근원적으로 탈바꿈시킴. 단순규제업무는 자동화시키고 더 나은 규제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함. (RegTech for regulations)
		20. 비접촉 방식 규제준수, 서류 제출, 서류 확인 등 절차 없이 디지털로 규제준수 확인(Touchless compliance)

이혁우 외, 정부사용매뉴얼, 2022.

**AI, 자동화로
규제 집행 시간 절감**

규제 도입 시 의견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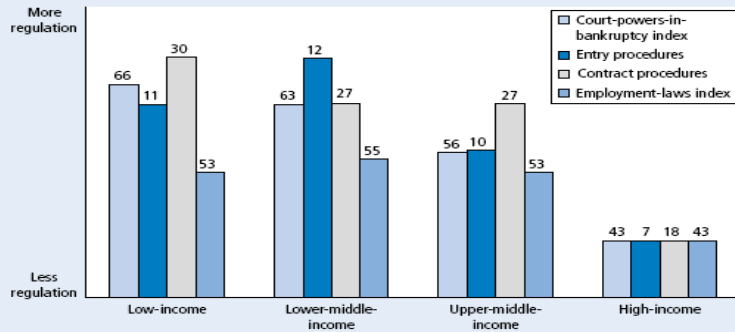
규제관련 부정부패 예측

규제비용 부담 감축

- 규제텍스트 자동 점검(중복성 등)
- 규제경험을 관리하는 정부
(기업은 고객경험을 관리하여,
pain point를 개선)

선진국일수록 규제개혁에 더 열심이다

Figure 3
Poor Countries Regulate Business the Most



Note: The indicators for high-income countries are used as benchmarks. The average value of the indicator is shown above each column.

Source: Doing Business database.

제안 하나: 규제 Super Saver 시상

매년,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선에 성공한 국회의원 시상
권위있는 행사, 상으로 발전시킴



[토론 1]

토론문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현황과 방향성 진단

- 토 론 -

2022. 9

조 성 봉
송 실 대 학 교

규제개혁 추진 방식과 규제의 수행 방식

- 규제개혁은 '일시적'이고 규제는 '일상적'이다.
 - 대부분의 정부는 규제개혁을 '행사'를 통한 보여주기 방식으로 진행
 - 사례: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2014년 9월 4일)
 - 그러나 일상적 규제는 해당 정부부처의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수행되고 있음.
- 일상화된 정부의 업무수행 방식을 깨트리기 전에 규제개혁은 불가능하다.
 - 규제개혁은 본질적으로 '정부개혁': 일상적 규제가 '일'인 정부의 업무수행 방식을 깨트리는 것이 규제개혁의 본질
 - 규제개혁은 기존 법률을 바꿔야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정부입법만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정부입법의 규제심사 담당: 기존 법률과 의원입법은 무풍지대
 - 규제의 본질은 '진입규제'와 '가격규제'이며 나머지 규제는 대부분 여기서 나온 '파생규제'
 - (예) 대부분의 법에서 '허가' 사항은 '진입' 관련이며, '인가'와 '승인'은 '가격'에 대한 사항
 - 에너지관련 법의 자연독점 규제 방식: '진입규제', '가격규제', '보편적 공급'(공급의무) 등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의 기본 골격

박근혜 정부,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 (2014. 9. 4) - 다음날 발표된 산업부 보도자료 -

- ◇ 에너지 신산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규정을 현재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음.
- 현재는 법령에 규정된 사업자만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향후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자*는 모두 자동적으로 지위를 인정받도록 개선하겠음.
- * 수요관리사업자, 전기차충전사업자, 원격검침인프라(AMI) 활용 부가서비스 사업자,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사업자,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기반 사업자 등
- ※ 단, 안정적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발전·송전·배전·판매·구역전기는 제외

가격규제는 ‘큰 정부’로 가는 지름길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경우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입법 동기
 - 1, 2차 오일쇼크 때 에너지가격을 규제하고 에너지절약을 유도
 - 주요 입법 내용
 -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금융/세제 상의 지원 시행,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효율관리 기자재’ 지정 및 사후관리,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고시, 효율개선 명령,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시험기관에서 측정,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기준 제시,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
 - 동원된 행정수단: 등록, 관리, 지정, 신고, 양성, 진단, 명령, 설정, 조치, 요청, 검사, 선임, 자격 부여, 사후관리, 인증, 표시, 지원 등 ‘조직적’ 행정 수단
- 그러나 이 모든 ‘조직적’ 행정 수단보다 우월한 것이 가격 기능
 - 한국은 에너지를 가장 비효율적으로 쓰는 나라
 - 한국의 에너지효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
 - 에너지 원단위도 OECD 평균보다 50% 상회
 - 에너지 가격 정상화는 행정수단과 정부기능의 확대 없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유도했을 것

윤석열 정부의 규제 이슈 - 에너지 가격 규제와 독립규제기관 -

- 에너지가격 정상화 이슈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위기
 -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가격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 에너지 소비에 대한 가격 시그널의 부재: 에너지 과잉 소비
 - 에너지 공급 기반의 악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적 위기
 - (예) 한전 적자('22년 상반기): 14조 3천억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21(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진출):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산업부는 국정과제 21 추진의 일환으로 독립규제기관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 이와 같은 가격규제 완화에 가장 큰 장애: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 규제개혁의 본질은 정부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이다.
- 핵심규제는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로 부터 나오는 파생규제다.
- 공공부문에서의 핵심규제는 경영규제다.
- 규제심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입법의 규제를 숙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법률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토론 2]

토론문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문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2020년대 하반기에는 1%대로, 2030년대부터는 0%대로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다수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은 어려워지고 장래에 대한 희망도 줄어들 예정.
- 성장률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성공여부는 다소 불확실. 저성장의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부진한 투자, 선진국보다 뒤진 과학기술, 교육 및 인적자본의 차질 등을 들 수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듯.
- 출생률을 단기적으로 전환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1인당 자본이 미국의 94%가 되는 상황(Penn World Table)에서 대규모 투자를 바라기도 어려우며,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과학기술 수준이 뒤지기는 하지만,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뒤진 기간은 대부분 산업에서 3-5년에 불과. 그리고 한국의 인적자본 수준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국제기관들의 조사결과가 다수 있음.
-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의 1인당 소득이 다른 선진국에 뒤지고, 성장률 추세는 계속 하락하는가? 법, 규제, 제도적 문제가 가장 분명한 이유로 보임. 국제적 경쟁력 조사, 각종 학문적 연구 등에서 한국의 법, 규제,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져 있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음. 한국 국내시장의 경쟁도 역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부진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국민의 소득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과제.
- 규제개혁은 개인과 기업이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불필요한 방해물을 제거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시켜 활동을 활발하게, 창조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과 기업을 위험과 리스크에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경제와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Top Down 철학과 정치관 때문에 규제를 다수 설립한 면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복적이며 제거하기 어려운 규제를 통한 경제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오랜만에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취지는 널리 환영해야 할 것 같음.
- 우리가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의 하나는 현재 상황의 변경을 막아 국민이 직면하는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지금같이 급변하는 세계환경에서 변화를 막을 수는 없음.
- OECD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일자리”를 보호하지 말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체제로 정책취지를 바꾸어야 할 것. 변화를 막는 제도를 유지하지 말고,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여기에는 규제개혁과 더불어 피해받는 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음. 현 정부의 규제개혁 체제도 과거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제개혁은 결과가 부진한 좀 실망적인 면이 없지 않았고, 국민들도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지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음.
- 현정부의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는 지속적인 변화와 규제개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
- 현재 규제개혁 제도는 잘 운영되면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선하고 싶은 점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초는 잘 되어 있음.
- 단,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도록 현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
-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규제개혁이 전 국민과 국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 여기에는 정부의 규제개혁 철학과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하고, 또 좋은 규제개혁들의 사례들이 나타나야 함.
- 개인적으로 현 정부 규제개혁 진행과정에서 가장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

가 다수의 규제개혁을 시행했다고 발표를 하지만, 왜 이러한 개혁을 했는지, 어떻게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임.

- 이러한 설명이 없이는 규제개혁의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으며,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아 또 하나의 사회적 쟁점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개혁 추진력이 1-2년 후에는 사라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음.
- 먼저 국민에게 개혁의 방향 및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부제도의 틀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심리 정신적 틀도 이번 기회에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음.